

[주간동향] 2006. 8. 10~8. 16

한국여성개발원 강민정 전문연구원

- ❖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인재 DB에 여성인재 확충
- ❖ 서울여성, 고령층 빈곤 심각
- ❖ 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선으로 입양, 유산 휴가 보장
- ❖ 보건의료노조, 병원 내 직장보육시설 현황 조사
- ❖ 열린우리당,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지원
- ❖ 통계청, 통계로 본 8.15광복 이후 경제·사회 변화상

❖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인재 DB에 여성인재 확충

중앙인사위원회는 8월 10일 여성 인재를 국가지도자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된 여성의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가칭 '여성 리더급 인재 발굴 프로젝트'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앙인사위가 구축한 국가인재 DB에 수록된 여성인재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재 DB에는 지난달 말 현재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5만8천390명과 민간전문가 5만7천221명 등 모두 11만5천611명의 인물정보가 등재돼 있다. 이 가운데 여성은 전체의 9.9%인 1만1천422명이며, 장·차관 등 정무직 인사에 활용하기 위해 특별 관리하는 '핵심 인재' 2천190명 가운데 여성은 11.9%인 260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재 DB에는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일정한 자격조건만 갖추면 등재될 수 있다. 학계는 조교수 이상, 경제계는 중견기업 임원 이상, 언론계는 부장급 이상, 법조계는 변호사, 노동계는 산별노조 국장급 이상, 시민단체는 임원급 이상이면 이름과 각종 신상정보가 수록된다. 특히 국가인재 DB는 공직 진출의 등용문으로 갈수록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여성 인재 발굴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자문위원이나 채용시험 면접위원 등을 선발할 때 중앙인사위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

고, 중앙인사위는 국가인재 DB에 수록된 인물정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여성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던 소수 계층에 대한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하고, “앞으로 국가인재 DB에 수록된 여성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앞으로 2만명 이상의 여성인재가 DB에 등록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서울여성, 고령층 빈곤 심각

(재)서울여성이 8월 15일 발간한 ‘2006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에 따르면 여성은 평생 남성보다 궁핍하게 살아가며,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는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41.8%가 본인명의 재산이 없었고, 65세가 넘는 여성들의 23%가 월평균 소득이 아예 없었다. 이는 70대의 노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우리나라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은 최고 65.5%로 독일(81.9%), 미국(78.2)에 못 미치지만 70대는 22.8%로 독일(1.5%), 일본(12%)을 크게 웃돌았다.

경제적 소외는 취업에서도 이어져, 2005년 상반기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89만 8000원으로 남성(294만 6000원)의 64.1%에 그쳤다. 게다가 여성근로자의 64.1%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일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25~29세에 높았다가(63.9%) 낮아진 뒤 40~44세(65.5%)에 정점을 이루는 M자형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에 최대 걸림돌은 육아 문제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재산(부동산)에서 경제적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여성이 41.8%나 된다. 남성이 6.1%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본인명의 재산이 1개 있는 여성이 38.5%, 2개가 14.6%, 3개가 4.1%였다. 남성은 3개(33.6%)가 가장 많았고 2개(30.8%), 1개(13.7%), 4개(13.3%) 순이었다.

특히 여성빈곤이 가장 심각한 집단은 고령층 여성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23%가 월평균 소득이 아예 없었고 44.6%가 50만원 미만, 17.7%가 50만~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는 남성은 9.5%, 50만원 미만은 28.9%로 빈곤이 덜했다. 또한 60세 이상 여성 가운데 절반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노후생활을 의존하고 있었다. 생활비(용돈) 마련 방법과 관련해 이 연령대 남성의 74.6%는 ‘본인 및 배우자를 통해서’라고 답했으나 여성은 이 같은 비율이 44.3%에 그쳤다. 반면 ‘자녀나 친척을 통해서’라는 응답은 여성(50.9%)이 남성(23.8%)보다 배 이상 많았다.

❖ 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선으로 입양, 유산 휴가 보장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

양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임신부 보호를 위해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허용하고 육아휴직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8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일을 포함해 14일의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임신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뒤 유산·사산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산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배정되도록 했다. 다만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휴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을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해왔으나 앞으로 육아휴직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직사회의 헌혈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헌혈을 하는 시간은 예비군 훈련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 보건의료노조, 병원 내 직장보육시설 현황 조사

보건의료노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병원 중 30.6%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에서 산하 병원 111개를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이 있는 병원은 34개로 30.6%에 불과했다. 반면 보육시설이 없는 병원은 77개로 69.4%였으며, 이들 병원 중 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병원은 7개, 직장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3개 병원에 그쳤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상시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혹은 상시 남녀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의무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보육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보육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9개 병원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보육시설 설치를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현재 여성의 자아실현추구와 출산 및 양육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여성들의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보육시설 설치를 제도화하고, 300인 이하 사업장이 단독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으로 묶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 된다”고 밝혔다.

❖ 열린우리당,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지원

열린우리당은 8월 16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8월 15일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계기로 위안부 박물관 건립 지원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 위원장은 "외국에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암스테르담 안네프랑크 기념관, 대만 위안부 기념관을 세워 과거의 만행과 참사를 생생한 역사적 교훈으로 간직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작 상해 임시정부청사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박물관 건립 비용은 전체 3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당에서 건립 기금을 모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대협은 지난 1994년부터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사업에 착수했으나 기금 부족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 통계청, 통계로 본 8.15광복 이후 경제·사회 변화상

통계청이 광복절을 기념해 각 분야의 주요 통계자료를 수집·정리해 발표한 「통계로 본 8.15광복 이후 경제·사회 변화상」에 따르면,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고 일하는 여성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학력 구성비는 1947년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97.9%, 대졸이상은 0.1%였으나, 2005년 현재 여성의 25.4%가 대졸 이상으로 여성의 능력과 사회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로 여성 취업자 구성비가 1963년 34.8%에서 2005년 41.7%로 6.9%p 증가한 반면 남성은 65.2%에서 58.3%로 6.9%p 감소했다.

총인구는 1949년 2018만 9000여명에서 지난해 4829만 4000여명으로 2.4배 늘어났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은 55년 3.3%에서 지난해 9.1%로 3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유소년 인구는 55년 41.2%에서 지난해 19.1%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저출산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15세 미만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지난 55년 8.0%에서 지난해 47.4%로 5.9배 높아졌다. 또 15~64세 인구가 먹여 살려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인 노년 부양비도 6%에서 12.6%로 2배 이상 높아졌다. 평균수명은 2005년 남자 75세, 여자 82세로 지난 1971년 남자 59세, 여자 66세에 비해 15~16세 늘어났다.

가구 수는 1955년 379만1000가구에서 2005년 1588만7000가구로 4.2배 늘었으나 평균가구원수는 5.5명에서 2.9명으로 줄어 핵가족화 경향을 반영했다.